(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보도 일시	2026.11.9.(월)	배포 일시	즉시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
		담당자	전 무 김재홍

농가는 계란 한 판 4,800원에 파는데 소비자는 7,354원에 산다!

농림부도 계란 공급기반 강화... AI 핑계로 소비자가격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 가처분 인용, 공정위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산지가격 기준 부재가 시장 혼란 키워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산지 계란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본 협회가 11월 9일 조사한 당일 산지 거래가격은 특란 기준 개당 약 160원대, 한 판(30개)으로 환산하면 4,800~5,000원 수준이다.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같은 날 소비자가격은 한 판당 7,354원이다. 소비자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무려 2,554원, 약 53.2% 높은 것이다. 지난 11월 4일 경기 연천 산란계농장에서 올겨울 첫 AI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에서도 추가 발생이 확인되는 등 산란계산업의 방역 위험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AI 발생에도 산지 계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농가는 한 판에 4,800원을 받고 계란을 판매하는데 소비자는 7,354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가격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농림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계란 공급기반 강화 밝혀... AI가 소비자가격 상승의 이유인가?

11월 9일 보도한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겨울 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산란계 사육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급 불안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약 8,401만 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10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약 5,163만 개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11월 생산량 역시 약 5,059만 개로 전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계란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규모는 약 43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약 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농림부도 계란 생산량과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공급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소비자가격 상승을 AI에 따른 공급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농림부 설명대로 국내 계란 생산기반이 강화되고 산지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면 소비자가격 역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협회는 AI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가 유통단계에서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계란 공급은 안정되고 산지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가격만 상승한다면, 이제는 유통단계의 가격 형성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 제재 이후 사라진 산지 가격 기준… 농가는 낮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산다

현재 계란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위 제재 이후 산지 거래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협회의 가격정보 발표가 중단된 이후 농가들은 적정 거래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으며,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도 가격 협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과거 산지 거래가격 정보가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거래 참고 기준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한다.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은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조사·집계한 통계라는 점에서 향후 거래를 위한 가격정보와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산지가격은 순기 발표로 산지거래가격 반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기준가격 부재로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유통업체 중심의 가격 결정구조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농가는 낮은 가격을 받고 계란을 판매하는데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매입가격, 판매가격, 유통비용 및 마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공정위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협회와 기준가격 정보체계에 관한 협의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협회는 과거의 방식을 무조건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산지 거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농가와 유통업체가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우기보다 계란시장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의에 진정성 있게 참여해야 한다.

AI 방역에 앞장서는 농가, 가격시장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본 협회는 동절기 AI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농가에 발생 동향과 차단방역 수칙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 차량·사람 소독, 야생조류 접촉 차단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협회와 농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가는 방역

부담과 생산비 상승을 감당하면서 제값조차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높은 계란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본 협회는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비정상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AI 발생을 이유로 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업체의 가격 형성 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란 거래가격 정보체계 마련에 조속한 협의기구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산지 계란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가격만 상승하는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농림부도 계란 공급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한 만큼, 이제는 유통단계의 가격 형성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공정위는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 농가도 소비자도 더 이상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